

식생활교육운동과 도농상생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식생활교육과 농업, 농촌

오늘 우리 농업은 위기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가경제는 쇠퇴하고,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업생산성은 정체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도농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경제 도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높아가고 있다. 농업이 쇠퇴하면 토양,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우리는 농업, 농촌이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농업, 농촌은 생태, 환경, 지역을 보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레저, 관광,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산업, 복합공간으로서 평가되고 보상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농업을 생명의 기초이고 원천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고 소홀히 취급되고 폄하되고 있다. 농업은 우리의 전통문화, 협동, 두레, 세시 풍속 등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온 뿌리이고, 지금까지 국민의 기초적 먹을거리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많은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정서 함양, 공동체 문화의 형성, 전통 문화의 계승 등 공공적 기능과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공적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적 농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생산, 식품소비,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 농촌과 관련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했고,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정책과 민간네트워크

국가는 최근의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속에서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식생활의 3대 핵심 가치를 환경, 건강, 배려로 설정하였다.

식생활에서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과 관련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배려) 식생활 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식생활교육의 1차 5개년 계획의 비전을 <건강한 국민, 녹색식문화>로 설정하고, 3대 핵심 가치이자 목표인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푸드마일리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음식쓰레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아침밥먹기 실천율과 전통 조리법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배려와 감사한 마음을 배양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참여율을 높여 먹을거리 제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법이나 제도, 정책 특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자발성, 창의성, 주체성을 갖고 식생활교육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을 확립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식품의 영양, 조리, 안전은 물론이고, 식품선택, 식사예절 등 식생활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과 실천 역량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생활교육운동을 통하여, 국민식생활의 바탕인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조성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식생활교육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정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국가식생활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 등 전국적인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토론과 교류, 전문가 조직과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범국민적 생활 실천과제를 개발,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확대 등 다양한 식생활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창립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추진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지역네트워크를 시·도, 시군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과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 기업, 기관 등에서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민관 협력 및 도농 협력형 교육모델과 지역 공간 활용형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보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식생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 기회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생활교육 주체들이 식생활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교육 교재를 연령별, 대상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은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기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은 어느 한 부처만의 책임이거나 주체가 될 수 없다. 식생활교육은 국가적으로 범부처적 역할이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이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프로그램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는 이를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국가는 5개년 단위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각 광역시도, 시군구는 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그 실적을 5개년 마다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국민식생활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식생활교육관련 민간조직으로써 식생활교육관련 정책, 정보, 인적 교류의 터미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